

經濟論理와 政策開發

- 75가지 事例들 -

황 인 정 편저

한림대학교 출판부

新華書店 經銷

（上海）

（上海）

（上海）

책을 내면서

필자는 학계에 몸을 담은 이후 줄곧 공공정책에 관련된 연구와 교육에 참여하여 왔다. 196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형성론’이란 과목을 처음으로 개설한 이후 여러 대학에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상황판단, 대안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과목을 가르쳤다. 1973년 유엔 산하 국제기구 (UN Asian Center for Development Administration, ACDA 지금은 UN Asia and Pacific Development Center, APDC)의 창설 과정에 참여한 필자는 亞太지역 고위관리들을 대상으로 개발전략 및 정책에 관련된 연구 및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운영했었다. 그 이후 1978년 귀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22년 동안 줄곧 정책연구에만 종사하게 되었다. 필자는 거시경제, 산업, 무역, 경제협력, 농업분야 등에 관련된 4개 국제연구기관에 이어 지방의 종합행정연구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학자로서는 너무나 과분하게도 그 중 4개 기관의 경영책임임을 맡는 행운(?)도 가졌다.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는 어떤 현상 또는 사건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의 원인과 전후 배경을 설명(explanation)하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태와 변화를 예측(prediction)하고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prescription)을 내리는 노력이다.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정책

연구는 주로 처방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목표지향적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처방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향 설정, 제도 개선, 사업구상 등에 관련된 주요 결심을 수반한다. 이것을 정책결정이라 한다면 그러한 결심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연관된 조치를 하나의 묶음으로 제시하든지 또는 문제해결의 여건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고자 하는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란 근본적으로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모든 정책은 그 나름대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고민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부서 공무원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족된 이후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적어도 한두 개의 정책연구기관을 두고 박사급 고급인력의 연구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우리의 行政文化로 굳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연구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책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과학적 분석을 요하는 심층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축적된 자료와 지식을 토대로 단기간에 수시로 정책대안을 분석·제시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과제의 경우는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또는 2년에 걸쳐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공무원들은 그 외에 수시로 공식 또는 비공식 형태로 연구의뢰를 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구원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정책연구의 단기적 수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응하는가 하는 일이다. 정책연구는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가 대종을 이루고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표되어 국가정책의 방향잡이 노릇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비록 외부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필자는 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수시 정책과제의 연

구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였다. 그 이유는 비록 연구수행기간은 단기라고 하더라도 정책선택이 미치는 효과는 심대하고 장기적인(far-reaching)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비교적 짧은 재임기간 중에도 수시로 수행한 단기 정책과제의 연구를 비교적 많이 수행했던 편이다. 그것도 관계부처의 의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연구원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그에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사전에 조기정보체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속히 관계기관으로 전달했다. 바로 reactive한 입장이 아니라 보다 pro-active approach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도는 다행히도 필자가 책임을 맡았던 연구기관에는 비교적 전문지식을 축적한 연구인력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신생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사회적 수요에 수시로 부응하기 위해서 필자 스스로 그러한 서비스를 열심히 제공한 적도 있다. 다만, 이 책에서 다룬 사례들은 필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 연구위원들의 초(超) 단기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다. 담당 연구위원과 원장 사이의 공동노력으로 또는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가능한 한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로 마무리한 작품들이었다.

필자는 단기정책연구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정책은 정책 결정권자(decision maker)의 고민의 산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연구는 그의 입장에서 수행하였다. 그것은 바로 국가목표 및 국가이익에 정조준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관련 정책분석의 초점은 한국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과정에서 국제경쟁력 제고에 맞추었고 분석과 판단의 준거기준은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자유경쟁, 공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에 두었다. 셋째, 국책연구원과 같은 제3자가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결과물은 정책결정권자의 결심 이전에 전

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수요에 맞추어서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직접 전달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정책판단에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버스 지난 뒤 손 드는’ 경우가 없도록 적시성(just in time, JIT)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연구결과물(executive summary)은 정책결정권자가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논리적, 체계적 그리고 평이한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마련하였다. 다섯째, 전달대상은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에게 최우선을 두었지만 그의 결심에 관련하여 상호 교감을 해야 하는 몇몇 참모는 물론 협조대상이 되는 관련 부처와 또 협의 상대가 되는 관련 국회의원, 정당 간부, 사회단체장 등 폭넓게 그러나 제한된 분들에게만 전달하였다. 그것은 정책판단에 혼선이 없도록 합리적 수준의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언론의 사전 공개로 인하여 여론과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논리가 불필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밀봉하여 정책결정권자에게 직접 은밀하게 전달하였다. 사실 구상단계의 정책연구는 본질적으로 음지(陰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대외 발표를 자제했던 편이었다. 대외 공개와 여론의 수렴 여부는 연구원의 몫이 아니라 정책당국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었다.

이러한 단기 정책연구 작업은 연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담스러웠다. 우선 필자와 연구위원들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국내외 일상적 정보 속에서 국가 최고책임자의 경영시각으로 항상 경제·사회적 움직임을 읽고 그 ‘문제성’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분석·정리해야 했다. 연구위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연간 한두 건의 방대한 연구보고서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도 수시로 대두되는 현안 정책과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참으로 집중적(intensive) 노력을 동원하여야만 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다. 그러나 한편 그들이 가슴 뿌듯한 보람도 느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편견으로 인한 정책 실패를 사전에 막는 데 기

여한 것이나 정확한 상황분석과 올바른 방향 제시로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게 한 역할은 연구위원들의 보람으로 받아들여졌다. 뿐만 아니라 필자의 입장에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研究院의 경영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각자의 전공 분야별로 장기연구과제에 매여 있는 과정에서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축적된 지적 자산을 할애해 준다면 조직의 한계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수시과제 연구는 한국경제 운용과정에서 크고 작은 정책의 결정을 통해서 장·단기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 점에서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필자는 이 기회를 빌어서 연구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해주신 여러 연구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기에 실은 문건은 필자가 다룬 117개 과제(주제별 색인 참조) 중 비슷하거나 일상적 반복과제는 제외하고 75건만 수록하였다. 필자는 이 책자가 정책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물론이며 대학에서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참고가 된다면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책자의 발간을 쾌히 승락해주신 한림대학교 출판위원회 교수님들과 수고를 맡아주신 한림대학교 출판부 관계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2001년 3월

춘천에서 황인정

목 차

• 책을 내면서	3
1. 『무노동 部分임금』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적 타당성 (이종훈; 1993. 5. 29.)	13
2. 秋穀收買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설광언; 1993. 6. 1.)	18
3. 지역醫療保險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권순원; 1993. 6. 7.)	22
4. 군인 및 공무원年金의 赤字발생과 그 대책 (문형표; 1993. 6. 7.)	25
5. 대기업集團 업종전문화의 쟁점과 정책대안 (유승민; 1993. 6. 9.)	30
6. 日本 정계개편의 背景과 경제적 파급 (황인정·김준경; 1993. 6. 25.)	37
7. 근로자의 人事·經營 참여 문제 (이종훈; 1993. 6. 30.)	42
8. 클린턴 대통령의 東北亞전략과 우리의 대응 (황인정; 1993. 7. 15.)	46
9. 『國際그룹 해체』 違憲 결정의 함의와 정책과제 (이영기; 1993. 7. 30.)	51
10. 설비投資의 부진요인과 대책 (좌승희·김준일; 1993. 8. 4.)	59
11. 日本 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황인정·김준경; 1993. 8. 9.)	65
12. 美國 『財政赤字 감축계획』의 배경과 영향 (황성현; 1993. 8. 20.)	71
13. 美國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노력과 그 함의 (고영선; 1993. 8. 20.)	76
14. 年金·基金의 재정투융자 활용방안의 타당성 여부 (문형표; 1993. 8. 21.)	82
15. 新엔高的 도래와 대응방안 (박원암; 1993. 8. 21.)	87
16. 藥·韓醫界 업권분쟁의 배경과 대응책 (권순원; 1993. 9. 6.)	92
17. APEC의 과제와 전망 (이홍구; 1993. 9. 17.)	96

18. 최근 日本의 경제활성화조치와 기대효과 (김준경; 1993. 9. 27.)	101
19. 金融實名制의 산업별 영향 (박준경; 1993. 9. 28.)	108
20. APEC頂上會談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방향 (양수길; 1993. 10. 19.)	112
21. 자본自由化의 추진과 정책대응 (박원암; 1993. 12. 14.)	118
22. UR타결 이후의 농촌지역 중장기 정책방향 (설광언; 1993. 12. 18.)	122
23. UR 이후 국제협상에서 예상되는 競爭政策 문제 (최종원; 1993. 12. 27.)	128
24. 한국경제의 국제화와 世界經濟전략 구상 (황인정; 1994. 1. 27.)	135
25. 地自制 하의 지역경제와 행정구역 문제 (김종기; 1994. 1. 28.)	139
26. 南北交易의 內國間 거래 승인문제와 우리의 입장 (조동호; 1994. 2. 3.)	144
27. '94 美·日 무역마찰과 우리의 대응 (황인정; 1994. 2. 16.)	148
28. '94년 물가정책의 基調 모색 (황인정; 1994. 3. 3.)	152
29. 탈냉전 시대の中·日 관계 전망 (황인정·이홍구; 1994. 3. 7.)	157
30. 日本의 장기 경기불황의 특징 및 전망 (김준경·박원암; 1994. 3. 9.)	163
31. 대통령 訪日·訪中의 의의 (황인정; 1994. 3. 29.)	167
32. 新3低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유윤하; 1994. 3. 30.)	170
33. 산업 兩極化와 경공업의 위상 제고 (박준경; 1994. 4. 2.)	174
34. 국민은행의 民營化와 책임경영체제의 유도방안 (이덕훈; 1994. 4. 4.)	178
35. 블루 라운드(Blue Round)의 展望과 對應方案 (이종훈; 1994. 4. 4.)	182
36. 규제완화정책의 평가와 보완방안 (최종원; 1994. 4. 4.)	187
37. 제3단계 金利자유화 실시방안 검토 (강문수; 1994. 4. 11.)	191
38. 최근 美國경제의 健實性의 원인 (김준경; 1994. 4. 26.)	195
39.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방향 (황성현; 1994. 4. 26.)	199
40. 貿易外收支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방안 (유윤하; 1994. 5. 16.)	204
41. 獨逸통일 경험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 (고일동; 1994. 5. 19.)	207
42. 엔화 및 油價의 전망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준경; 1994. 5. 21.)	213
43. 北核「사나리오」와 주변국의 입장 (황인정; 1994. 6. 13.)	217
44. 企業다변화규제와 업종전문화시책의 타당성 (유승민; 1994. 6. 20.)	222

45. 경제력集中에 대한 기본시각과 정부역할 (유승민; 1994. 6. 20.)	230
46. 공기업별 민영화 추진방향 (송대희·재정팀; 1994. 6. 20.)	235
47. 공무원연금의 赤字발생과 그 대책 (문형표; 1994. 7. 2.)	242
48. 南北頂上회담의 가상의제와 대응 (황인정·북한경제팀; 1994. 7. 3.)	247
49. 엔高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김준경; 1994. 7. 14.)	252
50. 거시정책 기본방향, 1994~97 (심상달·백웅기; 1994. 7. 22.)	257
51. 금융실명제 1년의 평가 및 향후과제 (김준일; 1994. 7. 30.)	263
52. 金融專業制度를 위한 정부구상의 배경과 합의 (최범수; 1994. 8. 2.)	270
53. 토초세 憲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과 대응방안 (손재영; 1994. 8. 6.)	275
54. 不渡率의 상승요인과 대응 (최범수; 1994. 8. 31.)	281
55. 공정거래법상의 告發權 문제 (신광식; 1994. 9. 28.)	286
56. 對北 투자의 허용시기 (박 진; 1994. 9. 30.)	290
57. 海外資本 유입과 거시경제 운용방향 (이덕훈; 1994. 10. 12.)	295
58. 自動車産業 新規進입에 대한 見解 (유승민; 1994. 10. 17.)	300
59. 북한경제의 自生力 분석과 개방가능성 (박 진; 1994. 10. 19.)	306
60. SOC 民資유치에 따르는 중요 쟁점 (김종기; 1994. 10. 26.)	310
61. 雇傭保險 도입에 따른 몇가지 문제 (이주호; 1994. 10. 31.)	314
62. '94년도 秋穀收買 방향 (설광언; 1994. 11. 3.)	317
63. 先物去來所 설립의 시기와 방법 (이영기; 1994. 11. 16.)	321
64. 世界化의 개념과 접근방법 (황인정; 1994. 11. 21.)	327
65. 합리적 勞使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방향 (이종훈; 1994. 11. 28.)	334
66. 자본자유화와 中小企業 자금난 (김준경; 1994. 12. 23.)	340
67. 資本流出 가능성과 거시경제 전망, 1996~97 (김준경; 1994. 12. 23.)	348
68. 消費者 本位 정책기조 확립 (신광식; 1995. 1. 4.)	354
69. 최근 金利급등 원인과 대책 (최범수; 1995. 1. 16.)	358
70. 멕시코 外換危機의 배경과 합의 (좌승희; 1995. 1. 16.)	363
71. WTO 출범과 中國·러시아의 입장 (이흥구; 1995. 1. 26.)	367

12 經濟論理와 政策開發

72. 미국의 對北韓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평가와 전망 (고일동; 1995. 1. 26.)	371
73. 美·中 무역마찰의 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황인정; 1995. 2. 13.)	376
74. 멕시코 外換危機 극복을 위한 국제지원과 우리의 입장 (김준경; 1995. 2. 21.)	380
75. 貸金業 도입에 관한 검토 (김준경; 1995. 2. 22.)	384
• 주재별 색인	389
• 편저자 및 집필자 소개	395

日本 정계개편의 背景과 경제적 파급

1993. 6. 25.

1. 문제 제기

- 1993년 6월 18일 일본 중의원은 미야자와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였음. 이것은 전면의 '하타' 와 이면의 '오자와' 가 제휴한 자민당 내 비주류파가 이탈한 결과였음.
- 이번 불신임안의 가결은 전후 일본 의회사(史)상 4번째에 해당됨. 그러나 이는 38년간 장기 집권해 온 자민당의 붕괴와 정계개편이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그러면 이번 사태의 배경은 무엇이며, 향후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2. 일본 정계개편의 배경

- 정정유착의 종식, 부패방지, 선거구조정 등 정치개혁 입법에 대한 미야자와 총리의 무성의로 당내외 불신감과 체제변화의 필요성이 확산되었음.
-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재계가 반드시 보수 자민당의 체제를 지원

할 필요성이 감소되었음. 보수당이 분열되어도 일본 국익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 냉전 이후 일본이 그동안 이룩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정치대국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도 부응하는 것임.

3. 일본의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

- 하타(羽田)파와 개혁파 의원들이 신당을 결성하고 기존 야당과의 제휴를 모색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하타(羽田)파는 6월 22일 44명의 의원을 규합하여 신보수주의 노선(路線)인 “신생당(新生黨)”의 창당을 선언하였음. 신생당은 점진적 개혁을 신조로 근본적인 정치개혁, 국제적 위상의 제고, 新일본 창조,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 등의 노선을 취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총선 이후 신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진보개혁 성향의 정치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므로 일본의 대외정책도 과거 미·일을 중심으로 한 안보유지체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특히 하타(羽田)파가 집권하게 될 경우 경제적 실리를 중심으로 對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 또한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되어 정치적 대국화를 겨냥한 대외정책이 전개될 것임.

4.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는 환율, 주가의 변동이 예상됨. 6월 15일 이후 21일까지 평균주가는 4.2% 하락하고 엔화도 4.6% 절하되었음.
- 그러나 정경유착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과 관료의 對정

치 의존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산업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금년 중 일본의 경상수지는 1,370억달러 흑자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미국의 대일적자(赤字)가 계속 확대되는 등 무역불균형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7월 7일 동경 G-7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정치불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무역흑자 삭감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들의 엔고 압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정치적 공백으로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형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경제회생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5.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과 EC는 UR협상 연내 타결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고 G-7회의를 전후로 큰 진전을 이루려고 노력해 왔음. 그러나 일본정국의 변화로 일본과의 합의를 얻을 가능성이 다소 희박해짐에 따라, UR협상 연내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나 대체로 UR협상 연내 타결의 방향으로 몰고 갈 것임.
- 또한, 미-EC는 G-7회담을 계기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예외없는 관세화”의 양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었음. 한편 일본은 (미국의 301조의 동원에 대비) 무역분쟁이 GATT를 통해 해결되도록 협약을 얻어내고자 하였음. 따라서 일본측의 최소한 성의만 있으면 G-7회담에서 어느 정도 협상타결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오는 7월 동경 G-7정상회담과 클린턴 미야자와 제2차 회담의 차질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G-7회담에서는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경제정책 협조와 러시아 지원문제 등 주요 의제를 다루게 될 것임. 또한 의장국으로서 일본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고 무역흑자와 관련하여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조정에 대한 다짐도 기대되었으나, 일본의 정치상황 변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미국은 현재 양국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미·일포괄협약(일본 경상흑자의 대GDP비율 축소, 공산품 수입비율 확대요구, 주요품목의 수입수량 목표설정 등)과 건설·농산물 시장개방, UR협상에서의 협력문제 등의 타결이 미야자와 정권과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이제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므로 미·일현안문제의 해결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일본의 차기내각이 약체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 대일협상 관계에서 미국 입장을 관철하기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임. 한편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제화와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게 되면 미·일통상관계는 보다 순조로워질 수도 있음.
- 한편 미·일포괄협약이 지체될 경우 미국과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과의 통상, 환율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 또한 미국은 미·일포괄협약의 타결로 신흥공업국이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에 이어 신흥공업국으로 통상압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6. 우리의 대응

- 냉전 이후 일본의 세계전략의 변화는 일찍이 예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번 정계개편과 그에 따른 일련의 정치개혁으로 새로운 전략

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서서히 갖추어져 갈 것임.

- 따라서 최근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 변화와 러시아의 변혁 등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대비가 요망됨.
- 특히 7월 10일 클린턴(미)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이러한 미·일관계의 미묘한 변화와 G7회담에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치밀한 준비가 요망됨.

(초안 : 황인정·김준경)

클린턴 대통령의 東北亞전략과 우리의 대응

1993. 7. 15.

1. 문제 제기

- 미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동경 G7회의(7월 7일)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였음.
- 이번 방문의 목적은 두 가지였음. 첫째,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이 UR 등 향후 세계 정치·경제질서를 형성해 가기 위한 입장 조율과 둘째, 미국이 동북아 내지 아·태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포석에 있었음.
- 그러면 이번 클린턴의 이 지역 방문을 통해서 거둬들인 결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은 무엇이라 생각되며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2. 미국의 동북아전략

- 미국은 우선 G7회의를 통해서 30억불의 對러시아 지원을 끌어냄으로써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테두리 안에 묶어 놓으려 할 것임.

- 또한 미국은 G7회의에서 UR타결을 위한 정지작업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으며, 곧 이어서 APEC을 주축으로 하는 「新태평양공동체」의 구상을 한 바 있음.
- 미국의 대외거래 규모로 보아 1980년대 중반 이후 아·태지역은 西歐지역보다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음. 만일 이 지역시장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기정사실이 될 경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일본에 앞서 APEC을 정상회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재무장관회의를 추가함으로써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미국 주도의 지역경제협의체 구성을 희망할 것임.
- 이로써 미국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중국을 묶어 보려고 할 것임. 개방화 이후 중국은 지난 14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연평균 9%)을 실현함과 아울러 단순한 방어목적 이상으로 군비를 확충해 오고 있음. 또한 개방·개혁화 과정에서 중국의 불확실성이 많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중국이 탈냉전시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국력이 너무 크기 전에 중국을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묶어 넣음으로써 동북아 내지 아·태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고자 할 것임.
- 특히 미국의 동북아 안보협의회의 제안은 주목할 만한 일임. 미국은 앞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차원의 불안정 요인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것임. 또한 미국은 아·태지역에 있어서 그들의 국익을 보호·신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군의 지속적 주둔(오키나와, 한반도)을 희망하고 있음.
- 미국의 국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래시장인 중국과 러시아의 구매력이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의 경제가 급

속히 성장되어야 함.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안보사슬로 중·러를 묶어 놓고 일본의 경제력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해서 점차 미국의 시장으로 확대 활용할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대 중국 최혜국 대우 조치는 인권문제를 구실로 유보하는 듯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임. 미국으로서는 최혜국 대우를 통한 대 중국 경제교류는 중국의 서구화 및 시장경제화뿐만 아니라 미국문화의 대 중국 침투와 중국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중국상품의 수입증대는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같은 제3국의 시장지분을 잠식할 뿐이며, 오히려 미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손해가 없을 것임.
- 이와 같이 안보와 경제협력을 하나의 틀로 묶어 보려는 미국의 대 동북아전략은 대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적 절대우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됨.
- 또한 미국의 동북아전략 목표는 대외적으로 미·일·EC 삼각경쟁체제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중국과 러시아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고자 할 것임.

3. 미국의 아·태 전략과 한국카드

- 미 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수행 차원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임. 역사적으로 미국의 극동외교정책은 중·일간의 그네 타기식으로 어느 일방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른 일방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국제여건에 따라 동반관계를 바꾸어 왔음.

- 현 단계에서 중·일 양국이 처한 입장과 전략목표를 미루어 보면 미국으로서는 그중 어느 일방에 편중하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클린턴의 방한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을 동반자로 삼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임.
- 한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로 보아서 그 동안 꾸준히 신장되어 온 한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한·미간의 동반협력관계가 형성되면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미국의 완충·조정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임.
-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일본의 경제적 독주를 견제하고 중국 시장으로 진출함에 있어서 한국과의 동반협력은 미국으로서 상당한 전략적 제휴효과를 갖게 될 것임.

4. 미국의 아·태전략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

- 일본은 그들의 텃밭처럼 관리해 온 아·태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에 밀리게 될 것에 대하여 다소 저항감이 있을 것임. 그러나 미·일·EC 간 삼각경쟁 속에서 일본은 현 단계에서 장기적 국익 보호를 위해 미국의 APEC 중심 공동체 추진에 대하여 수용·협조하게 될 것임.
- 중국은 신태평양공동체가 미국 주도로 형성·운영되어 갈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소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음. 또한 ASEAN의 경우도 미·일·가동 선진국들에 대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ASEAN국가들 간의 협력유대가 이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案에 다소 소극적 자세를 취할 것임.
-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구축되었으며, 미국 주도의 서방지원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고, 한편 대 일본협력에 있어서는 북방 4도, 안보문제 등의 제약요인 때문에 오히려 미국

주도의 지역안보·경협 구도를 환영할 것임.

5. 한국의 대응

- 미국이 APEC 격상과 신태평양공동체 형성을 주도함에 있어서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우선시하게 된 것은 바로 한국이 이 지역국가들 사이에 정치·경제적 중간위치에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차원에서나 양국차원에서 한·미간 협력·동반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임.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한·미간의 경제협력대화기구(DEC)를 통해서 기술·산업협력, 통상현안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동반·협력사업에 관한 협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APEC의 발전방향과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요망됨. 특히 APEC과 NAFTA 관계, APEC과 AFTA와의 관계, APEC권내 무역분쟁 해결방안,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투자촉진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의 개발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초안 : 황인정)

日本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1993. 8. 9.

1. 문제 제기

- 7월 8일 일본 총선의 결과로 1955년 이후 38년간 누려왔던 保·革 양당체제가 붕괴되고 非자민 연립정부가 출범되었음.
- 新정부는 탈냉전시대 일본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 정치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범 되었음. 따라서 신정부의 정치적 성격과 정책기조에 함축되어 있는 향후 일본의 진로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음.
- 그러면 신정부 탄생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이며 신정부의 정책기조, 특히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 신정부의 출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가?

2. 비자민(보수성) 연립정권의 성립배경과 성격

가. 역사적 맥락

- 제2차 대전 이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으로서는 이제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국민의 보편적 정서임.

- 구체적으로 ① 헌법개정 및 자위대 개편을 통한 국가주체성의 확보 ② 미국 추종 외교를 지양함으로써 대외 자주성 확립 ③ 냉전 체제 하에서 보수 장기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관·재 삼각유착관계의 차단 ④ 대내외적으로 정치도덕성을 확립하고 또한 국가경영의 합리화와 경쟁력의 강화를 추구하게 됨.
- 이러한 국수주의적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정치체제도 불가피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정치개혁이 바로 이번 과도적인 연립정부의 역사적 명제이며 또 그 과정에서 비자민 정권이 대두된 것임.
- 특히 7.18 총선은 냉전 이후 현실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회당의 몰락을 촉진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앞으로 신내각의 정치개혁 입법(선거법 개정)에 따른 다음 선거에서 사회당이 몰락하고 그에 따라 의회의 개헌선이 개편되어갈 것임.

나. 신내각의 성격

- 과도성, 한시성(6개월~1년)
- 개혁 지향
- 국수주의적 성향(친보수 우파)
- 복합성(제약)

다. 신정부의 정책기조

- 첫째, 「정치개혁법안의 연내입안」: 정치개혁의 내용은 병립제(並立制)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 외에 부패방지를 위한 연좌제의 확대와 벌칙강화, 공비(公費)조성을 위한 기업·단체헌금의 폐지 등 구체적인 개혁 목표를 일정기한 내 추진할 것을 명기하여 '비자민 정

권수립'의 의의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음.

- 둘째, 외교·안보 등의 기본정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계승한다」라고 하여 안보·자위대·원자력발전·소비세 등 당의 견해가 크게 틀리는 것도 사실상 모두 유보하고 있음.

3. '호소가와'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

가. 경제정책 방향

- 비록 한시적 과도내각이 정치개혁에 우선하여 경제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일본경제가 임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을 것임.
- 내수확대정책의 모색: 이미 비자민 7당은 연립정권의 합의사항으로 경기회복을 우선과제로 할 것에 합의하였음. 그 방법으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국민생활 중시의 예산배분, 규제완화 및 종합적 세계개혁에 의한 내수확대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금융완화를 통한 금리인하가 투자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면서 사회·공명당은 금리인하가 소예금생활자를 희생시킨다고 보아 반대하고 있음.
- 재정과 세제개혁: 경직적인 현행 예산 배분방식 및 보조금 제도의 개선으로 재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중시하는 예산편성이 예상됨.
 - 재정수입은 종합적 세제개혁 실시 및 소득세 감세 예정으로 불투명함.
 - 현재 냉각된 개인소비를 자극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소와 또한 세수부족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검토되고 있으나 대장성의 반대로 뚜렷한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음.
- 행정제도 개선: 행정개혁이 새롭게 논의될 것이며 규제완화와 정

보공개도 보완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되 자력발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지방산업의 진흥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농업 : 쌀의 예외 없는 관세화 반대 및 농림어업의 재건을 약속하고 있어 농업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지역개발 : 동경 수도권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매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책이 수립될 것이며 지방자치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음.
- 노동정책 : 연간 총 1,800 노동시간의 조기 실시 및 주택 확보, 통근난 등 도시근로자 대책이 제시될 것이며 여성능력 활용방안도 강구될 것임.
- 복지측면 : 연금재정의 안정, 의료제도 및 각종 보험제도의 확충, 골드플랜·개호(介護)제도의 충실 등에 관한 시책이 예상됨.

나. 대외경제정책 방향

- 무역 및 해외투자 : 외교 스탠스의 기본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외통상협력, 시장개방 등에도 독자적 노선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임.
 - 자국이익을 위한 보다 적극적 협상태도
 - 해당분야에 따라 종전보다 시장개방 여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질 것임.
 - 해외개발원조(ODA)의 점진적 증대
 - 영향력확대를 위하여 전략적 해외직접투자를 장려
- UR 타결 : 연내 타결을 위하여 일본도 노력할 것이나 쌀 수입개방 반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정부도 반대입장을 견지할 것임.
- APEC 전략 : 亞太지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경쟁관계는

불가피할 것이나 당분간 미국 주도의 APEC 강화에 협조할 것임.
그러나 對중국 경제협력은 안보상 견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APEC
올타리 내에서의 소극적 협력에 그칠 것임.

4. 향후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일본경제전망(단기)

- 미국의 WEFA는 일본 정계개편이 금년 하반기 중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하반기부터 일본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경제는 새로운 정부의 취약성 및 정책수행 방향의 불확실성으로 오히려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임. 정계개편에 따른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가 결국 기업가의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노무라연구소의 7월 전망에서는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내년 1/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新연립정권은 정책수립에 관해 행정관료들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당의 영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국내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계개편 이후 집권 정치인들은 대부분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행정관료 출신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정·관 동반관계가 없는 상태임.
- 1990년대 후반 이후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는 2~3%의 저성장이 예상됨. 정책기조는 내수중심의 수요패턴과 정보관련 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일본경제의 글로벌화의 추구에 둘 것이며 정부의 역할은 공공재 제공에 의한 국민복지 향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나.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 단기적으로,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과 국내 경제정책 운용상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대 일본 수출입 및 경제협력관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新정부와 관계없이 미국에게 아태지역은 유럽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 되었고, 일본은 이 지역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다져 왔음. 따라서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독자적 영향력 강화 노력에 대하여 미국의 견제가 불가피할 것임. 한국은 대외경협에 있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어떤 이유든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 등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따라서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한 한국산업의 구조고도화 전략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일 동반관계를 미래시각에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최근 일부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협한론이 친보수 우파의 전략적 포석이라면 설사 엔고에 따른 일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이 실현되더라도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특히 핵심기술의 대한 이전은 일본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보아 제한적일 것임.
- 따라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이 분야 산업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보다 능동적으로 이 분야 투자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그것이 곧 일본의 투자유치의 첩경이 되기도 할 것임.

(초안 : 황인정·김준경)

한국경제의 국제화와 世界經濟전략 구상

1994. 1. 27.

1. 국제화의 목적

-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의 목표는 그를 추진하는 과정과 결과로서 ① 우리 기업의 전방위(全方位) 경쟁력을 제고하고 ②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선진화를 실현하며 ③ 세계 속의 한국 경제의 위상을 제고하며 그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음.

2. 한국의 세계경제 전략案: 기본골격

-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경영(globalization) 추세와 탈냉전 이후 구주 단일(單一) 시장화 가속, NAFTA 형성, UR 타결 등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경제질서를 전제로,
- 미국의 동북아전략 개념과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적 입지를 APEC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감안하면서
- 한국은 산업, 무역, 기술, 안보 차원에서 한·미 협력을 기본축으로

하고, 일본과 중국을 양 날개로 삼아 우리의 경제 실리와 안보를 함께 추구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과 견제를 신축성 있게 전개해야 할 것임.

- 미국과는 교역·투자환경 개선과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생산기술과 중국의 시장을 한국 기업의 활력소로 삼아 한국경제 선진화를 추구함.
- 세계경제 운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국익을 사전적으로 챙기도록 함.
- 국제적 위상 제고와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함.

3. 전략의 구체화

가. 세계경제질서에 동참

- WTO 구성에 한국대표 및 전문가의 상주파견을 통해서 UR 이후 경제질서의 구체화 과정에 적극 참여
-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세계경제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의 결정 등에 적극 참여
- APEC의 무역투자위원회(CTI)의 의장국 자격을 활용하여 한·미간 조율을 전제로 APEC을 통한 중국, 일본 등의 시장개방 및 접근에 공동 참여

나. 세계시장 관리의 우선 순위

- 미국 : 그 동안 우리의 주력시장으로서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 개발을 수용하여 왔음. 앞으로도 그 수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일본 :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시장개방은 향후 10~15년간 우리 상품의 새로운 주력시장으로 한국경제 선진화의 여건을 제공할 것임.
- 중국 : 향후 10~15년 이후부터 우리의 제3세대 주력시장으로 부상할 것임. 따라서 중국시장 관리를 위한 인맥, 정보 「노하우」 등을 지금부터 축적·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략 구상

- 구조적·장기적 시각에서 일본, 중국 간의 경제·안보상의 마찰이 있을 경우 한국이 완충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위험 부담은 한·미 간 협력체제 속에서 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 이 전략방향은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미국경제력의 회복 노력과 잘 조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업차원의 전략수단

- 국경 없는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으로 표출됨.
- 따라서 기업은 전방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협력선과 동반기업을 찾아야 할 것이며 산업기술협력, 시장, 기술 등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야 할 것임.
- 기업 스스로 경영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를 심화하면서 「네트워크」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마. 국가 차원의 국제화 관리 「인프라」 구축

- 국제 문제 및 분야별 협상 전문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활용
- 산업, 지역정보의 체계적 축적·관리
- EDCF 등 자금의 조성 및 활용

-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정비 강화

(초안 : 황인정)

'94 美·日 무역마찰과 우리의 대응

1994. 2. 16.

1. 문제 제기

- 2월 10~11일 미·일 포괄협상의 사실상 결렬로 미국은 누적된 對日 무역역조에 대한 보복조치를 감행하게 됨.
- 그 일환으로 미국측은 엔화의 급격한 절상을 유도하고 있음. 특히 일부 견해는 일본의 대미 무역관행과 구조적 이유 때문에 엔화가 90~100엔대로 절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음.
- 그러면 이러한 엔고는 일시적 현상인가? 엔고가 지속된다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것이 우리 경제에 무엇을 함축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2. 엔고의 지속 가능성 여부

- 미국의 엔고 유도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엔화의 구매력을 감안하면 이번 엔고는 일시적이며 얼마 후에는 110엔대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미국의 대일 요구조건은 일본 경제구조의 특성과 현재 깊

은 불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도 과도정부의 정치역량과 책임의 한계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추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가 없음.

- 한편 냉전 이후 미국으로서는 대일 무역적자 해소가 최대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대일 압력을 늦출 가능성은 희박함.
- 따라서 적어도 일본의 정치개혁 입법에 따라서 안정되고 보다 강력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나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음 미·일 정상회담(당초 7월 예정이었으나 연기 가능성이 큼)까지는 100~105대의 엔고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3. 미·일 무역마찰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엔고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상승 등, J커브 효과로 인하여 '94년에 일본의 무역흑자는 오히려 높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측의 대일 적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게 될 것임.
- 엔고로 인한 일본상품의 실물 수출수요가 줄어들 것임. 한편 오는 4월부터 서서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15조엔 경기부양시책의 내수진작효과로 해외수요 감소에 대하여 다소 보완작용을 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일본의 경기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미·일 무역마찰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은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임. 특히 중간 수준 내지 준첨단산업의 해외투자를 추진하게 될 것임.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엔고는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상품의 미국 및 제3국에 대

한 수출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여줌. 또한 엔高뿐만 아니라 15조 엔의 경기진작시책은 일본시장의 개방화 추세와 맞물려 우리의 대일 시장진출 기회를 그만큼 늘려줄 것임. 따라서 '94년의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했던 3억불 적자에서 20억불 수준의 흑자로 바뀔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흑자는 우리의 총통화운용을 어렵게 하고, 당초 예상했던 6.7% 물가인상을 훨씬 웃도는 7%대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왕성한 설비투자가 일어나고 성장은 8.5%를 웃도는 등, 우리 경제가 갑자기 과열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가능시되고 그에 따른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경기과열 분위기는 더욱 부추겨질 것임. 이러한 거시경제지표는 '95년에 더욱 과열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물가안정화 유도, 적정 경제성장 및 경상수지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응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원貨 절상(5% 또는 7%)의 단기간내 실시를 서둘러야 할 것임. 그 결과 수입증가로 물가억제, 경상수지 흑자감축 효과, 중시 해외자본 유입의 위축효과 등이 기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로 남아있는 한 수출은 감소되지 않을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94년도 임금안정을 유도하여 임금-물가인상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해야 할 것임.
 - 국내부문 통화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재정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정치적 이유라 하더라도 재정적자를 전제로 한 수출증대는 억제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소요재원의 충당뿐만 아니라 호경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품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원확대, 과표현실화, 환경오염세 등 증세 노력

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기업의 저리해외자금 조달을 위한 상업차관 허용이 점차 불가피하지만, 그보다는 외화 대부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활용 기회를 늘려주어야 할 것임.
- 첨단산업 분야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규제 완화, 노사안정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이 기회에 일본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대일 무역역조를 점차 시정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한·미간의 산업·기술협력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야 할 것임.

(초안 : 황인정)

'94년 물가정책의 基調 모색

1994. 3. 3.

1. 문제 제기

-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히 경기회복 초기단계에서 물가의 안정은 선결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2월말 물가는 '93년 말 대비 2.4%나 상승하였음. 이러한 가파른 물가상승세에 대한 언론의 편견과 정치권의 민감한 반응은 물가정책 당국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면 과연 바람직한 물가정책은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는 행정주체와 지원체계는 어떻게 정비되어야 할 것인가?

2. 물가정책의 기본방향

- 규제형 물가정책으로부터 시장주도형 물가정책의 정착
- 고도성장기를 벗어난 저속성장기에 걸맞은 물가체제 정비
- 수출주도 산업구조에 걸맞은 물가구조를 조정하여 개방체제 하에 산업구조조정에 부응하는 물가정책 지향

3. 최근 물가상승 원인

- 구조적 이유: 1986~91년 간 고도성장경제에서 저속성장경제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상대적 공급부족이 잠재화되고 있음. 특히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것이 내구재 소비, 건설 등의 수요를 자극하는 등 초과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갭」의 발생
- '코스트 푸쉬' 요인
 - '88년 이후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의 누적은 임금인상-물가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음.
 - SOC 시설 부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 높은 지가와 이에 따른 고율의 임차료 등 때문에 생산간접비 부담과 유통시설비의 높은 부담

4. 물가관리 책임의 효율적 분담

-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에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 시장개입이나 강력한 물가관리가 곤란해짐.
- 따라서 정부만이 아니고 시장 및 가격형성에 참여하는 시민 당사자도 물가에 책임을 지도록 의식의 전환을 호소해야 하며,
- 정부의 경우도 물가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련부서와 지방정부도 주요물자의 수급관리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임.

5. '94년의 물가정책방향

가.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 14~17%의 총통화증가율은 하한에 가깝도록 유지: 이를 위해 자

본유입의 속도를 억제하는 대책 강구

- 자본유입속도와 경상수지 흑자동향을 감안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원貨의 상당폭 절상(切上)을 유도
- 종합재정수지 적자폭의 최대한 억제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률을 7% 내외에서 억제 :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과도한 노동수요의 확대 억제

나. 안정공급의 확보

- 주요 생활관련 물자의 공급대책 (중앙의 實物부서 및 지방정부 책임)
- 수입정책의 활용*
 - 관세율 인하 : 할당관세의 적용기간, 수량을 탄력적으로 운용
 - 수입품의 유통구조의 점검 및 개선
 - 긴급수입 :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족품목을 긴급수입하고 필요시 할당관세의 적용
- 중소기업 및 농업의 근대화, 생산기반의 정비 등 생산성 향상*
- 유통산업의 규제완화로 중대규모의 유통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소규모 유통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유통의 합리화*

다. 「코스트푸쉬」요인 제거

-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억제 유도

라.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적용 등 경쟁조건의 정비*

마. 공공요금 현실화 시기의 조절*

- 바. 내외가격차의 축소* : 금융개방에 따른 종합수지의 흑자 실현으로 원화절상이 불가피할 경우 그에 따른 내외가격 차이를 축소해야 할 것임. 따라서 앞에 표시(*)된 수단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활용

6. 물가동향 조사 및 감시제도의 도입(일본의 예 : '73년부터 실시 중)

가. 조사체계

-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서 전국 1,000~1,500명의 모니터를 지정·하달하고 그들의 조사결과를 지방별로 회수하여 기획원에 송부함. (연 6회 정도 실시)

나. 조사내용

- 주요 생활관련 물자 및 서비스의 가격동향을 조사
- 물가에 관련된 주요 정보(예 : 소비자 구매태도, 의식, 물가행정, 수입품의 소비형태 등 수시로 제기되는 사항)의 수집

다. 지방정부의 위탁된 업무

- 물가모니터 후보자의 추천
- 물가모니터 조사실시
- 물가모니터 설명회·연수간담회
- 물가모니터 지도 및 사례비 지급(일본의 경우 1회 2,000엔)

라. 기대되는 효과

- 일반소비자로부터 가격정보를 직접 청취
- 일반소비자에 의한 조사·감시로서 물가억제 효과
- 시민의 현명한 소비행동을 유도

7. 물가통계의 재정비 검토

— CPI를 소득단층별로 분류하여 분석:

· 홍콩의 예

	월소득(HK\$)	대상가구수(비중)
CPI · A	2,500 ~ 9,999	50%
CPI · B	10,000 ~ 17,499	30%
H.S.CPI	17,500 ~ 37,499	10%

— 대학등록금, 병원수가, 장거리여행운임(비행기, 고속버스) 등과 같이 일시적이고 일정기간에만 이용하게 되는 공공요금은 CPI에서 제거하여 서민생활물가를 별도로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초안 : 황인정)

탈냉전 시대의 中·日 관계 전망

1994. 3. 7.

1. 문제 제기

- 냉전 이후 국가간의 관계는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음.
- 향후 상당기간 동안 세계질서는 미국이 주도해 갈 것이며 한편 중국과 일본도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中·日 관계는 역사적·지정학적·지경학적 차원에서 협조보다는 여러모로 대립관계가 잠재되어 있음. 특히 석유자원 확보를 둘러싼 對중동 접근, 전략물자 수송라인 확보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차이나, 한반도 등에 대한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중·일간에는 상호협조와 아울러 경쟁적 마찰요인이 있음.
- 또한 중·일 양국은 당분간 공히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을 것임.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정치적 동반자로, 일본은 북한을 경제협력의 상대방으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은 한국을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일본은 한국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치·외교협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그러면 냉전 이후 중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국가목표와 亞太지역 전략은 무엇인가? 그러한 배경에서 두 나라 사이의 대립·협력 관계는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2. 중·일의 국가목표와 亞太지역 전략

가. 태평양 시대의 일본

- 일본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정치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함.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과 역할범위를 확대해 가려 하고 있음.
- 그동안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동남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자와 원조를 통해서 지배적 영향력을 확보하였음. 이를 토대로 일본은 아태지역에 있어서 당분간 미국과 공동으로, 단 미군의 철수 후에는 독자적 지도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임.
- 한편 일본은 단기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북방 4도를 반환받고,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잠재력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대중 시장을 확보해야 하며, 범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경제마찰을 피해 가는 데 대외관계의 역점을 두게 될 것임.

나. 태평양 시대의 중국

- 중국의 당면 국가목표는 개방과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정치력에 걸맞은 중국경제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통해서 21세기 초에는 아세아의 NICs를 따라잡기를 희망함.
-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정치와 경제의 기본이념이 서로 다른 구조적 모순 속에서도 과도기적 운영에 성공하고 있음. 덩소핑 이후 시장경제 수용에 수반되는 경제불안요인이 있고 또한 민주화의 욕구가 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음. 또한 중국의 남

북간, 동서간 경제적 격차로 인한 지역간 마찰이 심화되어 중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예견도 있음.

- 45년 이상 동면하고 있던 민족주의가 경제적 성공과 번영에 따라 부활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중화사상에 뿌리를 둔 패권세력으로 표출될 수도 있음. 특히 선진국의 대중 무역 제재 또는 일본의 재무장 등이 중국의 전통적 패권주의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음.

3. 중·일관계의 발전

가. 무역관계의 현황과 전망

- 1972년 중·일수교와 1974년 무역협정에 이어 어업, 항공, 해상관련 쌍무협정도 체결되었음.
- 1980년부터 일본은 중국을 최혜국으로 대우하여 쌍무교역 규모를 늘려 왔음. 양국 교역 규모는 '93년 현재 300억불에 달하며 '80년대 전반까지 중국은 일본에 주로 원유를 수출하였고 일본은 중국에 기계류와 조립금속제품을 수출하여 두 나라가 경제적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었음.
- 그러나 홍콩·대만으로부터 유입된 직접투자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섬유류 및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중·일 교역관계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변모하여 왔음. 특히 1980년대 초반 중국이 국내사정으로 외국(일본)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후 일본은 중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음.

나. 투자관계의 변화 추이

-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중국정세의 불안과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투자규제, 관료주의 때문에 1983년까지 큰 진전이 없었음.

- 1985년 이후 엔고로 인하여 일본 중소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나고 해외생산이 가속화되어, 북미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였음.
- 일본의 대중 투자는 천안문사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중국의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투자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음. 최근에는 음식류, 섬유류, 호텔, 가전제품에서 금융, 부동산, 수송, 광업, 자동차 등으로 투자대상이 바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상의 고려 때문에 일본의 대중투자는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음. 일본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5%(약 34억불)에도 못 미치지만 앞으로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92년 말 누계로 對미국 1,550억불, 對아세안 292억불, 對홍콩 108억불, 對한국 44억불, 對대만 31억불임)

다. 원조관계

-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강성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임.
- 일본은 중국과 쌍무교역 규모를 늘리고, 중국을 일본의 주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확보하며,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음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고자 함.
 - 1979년 처음 대중 공적원조(13억불 상당): 일본이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투자재원으로 활용되었음.
 - 1984년 두번째 원조(19억불 상당): 일본기업의 중국진출을 도와주고 중국에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제공되었음.
 - 1988년 세번째 원조(8,100억엔): 중국의 환경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었음.(천안문사건으로 잠시 중단)

- 향후 일본은 ① 중국과 일본의 우호관계가 세계평화에 필요하며 ② 중국의 시장성(인구와 국토규모) ③ 중국의 연안지방과 내륙 지방의 경제적 격차 해소 ④ 중국의 개혁을 지지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4. 미국이 중·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 냉전시대 일본의 대중관계는 대미관계의 종속변수였음. 일본은 대중국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① 서방세계의 대중국 정책과 모순되지 않으며 ②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며 ③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천안문사태 이후 일본은 대중관계에 있어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함. 최근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최혜국 대우의 지속과 중국의 GATT 가입을 지지함.
- 특히 대일 무역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은 중국과 안정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한편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5. 전망과 합의

- 앞으로 중국의 개방화와 근대화가 가속화되고 일본의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중·일 경제협력 관계는 심화될 것임.
- 일본은 냉전시대 미국시장을 상대로 또 미국협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실현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시장 잠재력을 의식하고 대중협력을 심화해갈 것임.
- 21세기 중·일간의 경제관계는 규모 면에서 현재의 미·일간의 경제

교류 수준으로 발전할 것임. 일본의 대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93년 300억불로 이는 미국(1,700억불), 아세안 4개국(550억불)의 뒤를 이어 세번째임.

- 그러나 일본의 대중시각의 변화가 없더라도 중국 자체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일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움.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희망하는 한편 등소평 이후 중국의 분열과 혼란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도 대중관계 발전에 반영할 것임.
- 당분간 중·일 양국은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동남아지역에 구축되고 있는 일본 경제권에 대한 견제를 의미함. 중국·홍콩·대만의 교역규모가 이미 세계교역의 5%를 점하고 있는 바, 중국은 대만의 기술 및 경영기법, 홍콩의 금융 및 사회간접자본을 중국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결합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일랜드, 싱가포르 등을 미래시장으로 개척할 것을 도모하고 있음.
- 태평양시대에 중국과 일본은 두 개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당분간은 중·일간의 갈등 가능성과 동남아의 우려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중·일 세력의 삼각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삼각균형적 협력체제 속에서 미국이 중·일간의 조정적 역할을 희망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내지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코자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산업·기술·무역·안보면의 한미협력을 기본축으로 삼고 대중·대일 교류협력을 양 날개로 신축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임.

(초안 : 황인정·이홍구)

대통령 訪日·訪中の 의의

1994. 3. 29.

1. 한·중·일의 미래 동반자 관계 설정

- 한·일관계 개선의 관건이 되어 왔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안보에 관한 현안문제를 다룸으로써 과거의 한일관계는 보다 진일보한 양상을 보임.
- 중·일의 잠재적 대립관계는 한·중·일 삼국이 미래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대통령의 방일·방중은 한국이 국력신장과 지정학적인 이점을 배경으로 양국의 이해대립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임.
-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문화적 고유성과 유사성을 발전시키고 미래의 주역이 될 삼국의 차세대 사이에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자표준화에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임.

2. 한·중·일의 삼각 경제협력의 기반 구축

- 대통령 순방으로 한·중·일 삼국의 경제협력은 동반과 보완의 관계

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됨.

- 최첨단기술을 가진 경제대국인 일본, 방대한 시장과 기초과학 기술을 가진 후발 개도국으로서의 중국, 성공적 경제개발 경험과 생산기술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 사이의 보완성에 기초하여 삼국 경제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그 가운데 한국의 중간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신 엔高 하에서 산업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반자가 필요한 바, 한국이 이를 담당함.
 - 일본은 엔고에 대응하여 부품산업과 기술의 대한 이전을 가속화할 유인이 있음.
 -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외국인 투자유치여건의 개선작업도 일본기업을 끌어들이는 호재로 작용할 것임.
-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의 본격 추진, 무역불균형 개선, 기술협력 강화,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 등에 합의
 - 일본측의 투자환경조사단 한국파견, 산업기술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한·일 테크노마트」개설, 대한 부품기술 이전 예상
- 중국은 우리나라의 미래 시장이며 강력한 과학기술 기반도 갖고 있음. 시장경제 초입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경제·통상분야에서 보완관계를 가지는 한국과 공동번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대통령의 방중은 이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됨.
 - 한국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국에 이전하면서 한국의 생산기술, 중국의 기초과학, 중국의 내수시장을 결합하는 형태의 산업·기술협력을 구축하게 될 것임.
- 한·중교역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개발과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일 필요가 있음.

- 자동차, 항공기, 전자교환기(TDX), HDTV의 합작생산을 구체화

3. 동북아지역의 안보체제 기반의 기초를 다짐

- 대통령의 순방은 북한 핵으로 인한 위기를 시의적절히 관리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한·중·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안보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도출하였음.
 - 북한 핵문제 처리를 위한 한·일의 공조체제 확인
 - 중국은 개방과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경제의 근대화와 경제부흥을 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안보가 보장되기를 원할 것임. 북한 핵 문제도 이러한 입장에서 한·중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함.
- 동북아 지역의 안보체제 기반이 대통령의 양국 순방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적 지도력을 입증하는 것임.

(초안 : 황인정)

北核「시나리오」와 주변국의 입장

1994. 6. 13.

1. 문제 제기

- 최근 북핵(北核)은 탈냉전시대에 돌출적 불안정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 북핵의 배경은 무엇이며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2. 북핵의 배경: 김일성의 위기관리 시나리오

- 김일성의 위기의식: 구소련 붕괴, 동구의 체제변혁, 중국의 자본주의식 경제운용과 이올러 그들의 대북한 경제교류 방식의 변화(경화본위의 교역)와 축소 등은 북한체제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김영삼 대통령이 “흡수통합은 하지 않겠다”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통합’이 불가피한 역사적 귀결이라고 우려하고 있을 것임.
- 김일성의 위기관리 주안점: 대외적으로 남한에 의한 흡수통합 가능성을 줄이고 대내적으로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경제를 살리는

데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3차원의 전략시나리오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첫째, 북한 내부통제: 내부의 체제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①準 전시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국민의 이탈과 반발을 조직적으로 사전에 봉쇄하고(빈번한 민방위훈련, 휴전선으로 병력집중, 동원훈련 등) ② 남포지구, 청진, 나진 등지의 경제특구화를 통해서 중국식 경제개방을 모방해 보고자 할 것임.
- 둘째, 對남한 전략: 남한에 의한 흡수통합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남공작 선상에서 남한사회의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을 조장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남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혼란을 조성하고자 할 것임.
- 셋째, 국제적 차원의 위기관리 전략: 'NPT 탈피선언'
 - 북한은 당초 對일본 배상청구를 통해서 경제협력을 모색하였으나 냉전 이후 사실상 주도국인 미국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남한의 반발과 미국의 냉담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함.
 - 한편 어렵지만 북으로서는 미국과의 직접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남한의 반발과 미국의 여론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극약처방인 NPT 탈피를 선언함으로써 미·북한간의 공식교섭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음.
 - 북의 일괄타결론의 목표는 북한은 이미 두 차례 핵교섭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국가로 공인' 받고 있는 이상 ①미·북간 국교를 개설하고 ② 미국의 경제원조(협력)를 제공받고 ③ 김일성 부자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북의 대미교섭이 성공하면 대일 배상을 통한 일본 대북 경제지원과 중국식 대서방 경험의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

임. 그때 북은 흡수통합과 체제붕괴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임.

- 상황판단: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현 단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대안 중의 선택이 될 것임. ① 과연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제재해 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하든지 또는 핵지대의 외과적 수술을 시도할 것인가? ② 또는 북이 원하는대로 일괄타결을 통해서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대가로 핵을 포기시킬 것인가?

3. 주변국의 입장 및 전략

가. 중국의 입장과 전략

- 중화사상의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의 지속적 분단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북의 존재는 중국의 국내정치의 안정과 체제유지를 위해서 필요함.
- 또한 한반도의 남북 견제 속에서 동북아 평화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對北 제재(制裁)와 그에 따른 전쟁발생을 원치 않음.
- 따라서 중국의 입장은 미·북한의 대화를 통해서 북의 핵포기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북의 체제유지를 미국이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할 것임.

나.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 러시아는 남북분단의 주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참여 없는 남북통일을 희망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현 러시아의 입장으로는 남북한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중외교로 그들의 국익을 챙기고자 할 것임.

-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갖게 될 것임.

다. 일본의 입장과 전략

- 일본은 궁극적으로 평화분위기 속에서도 남북한의 분단이 지속되는 것이 일본경제와 향후 동북아전략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임.
- 대북 제재는 경우에 따라서 한반도에 전쟁을 가져옴으로써 일시적으로 일본경제의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의 기회로 발전하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동북아 관리에 불리하다고 판단할 것임.
- 따라서 일본의 속마음은 미·북 일괄타결을 통해서 북의 존재를 보장해 주기를 희망할 것임. 일본은 이미 대북 국교정상화, 경제협교섭을 시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한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대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현실적으로나 장기적으로도 일본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것임.

라. 미국의 입장과 전략

- 현 단계에서 북의 제재를 통한 불안조성과 경우에 따른 한반도전쟁이 미국에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미국은 보수여론에 호응하고 군수산업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한편 동북아의 불안정이 미국경제의 회복과 對동북아 경제·안보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임.
- 한편 미국은 러시아, 중국 등 UN 안보리의 거부권을 의식하고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국제여론을 의식하면, 북핵 포기에 대한 보장만 있다면 설사 한국의 반발이 있더라도 '일괄타결'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현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표명의 이면과, 일본·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은 결국 '북의 핵 포기' 보장을 전제로 대북 일괄타결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쉬울 것임.

4. 우리의 대응

- 결론 : 냉전 종식과 더불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심축의 평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왔음. 북핵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4강의 지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음.
- 신판 4강 분할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의 위상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만일의 경우 일괄타결이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임. 이 경우 북한을 우리의 경협 대상으로 맞이함으로써 정치·경제적 흡수통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일본, 중국 등의 북한 이용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임.
- 우리 스스로라도 제한된 정보 범위 내에서 북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의 작성, 대북 경제협력 전략의 수립, 제3국에서 남북한 경제 공동진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구상을 세워야 할 것임.
- 한편 미국의 대북 제재는 경우에 따라서 남북통합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그러나 그것이 다국적군의 개입을 초래하는 경우에 '북의 새로운 체제'를 전제로 남북통합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을 것임으로 어느 경우에도나 대비해 두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전제로 강력하고 안정된 통일한국이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평소 설득해 두어야 할 것임.

(초안 : 황인정)

南北頂上회담의 가상의제와 대응

1994. 7. 3.

1. 문제 제기

-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7월 25일~27일에 평양에서 개최키로 하였음.
- 북핵의 투명성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미묘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참여동기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자세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주도해 가야 할 것인가?

2. 북한측의 동기와 우리의 대응자세

- '93년 2월 신정부 출범 때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제의했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김일성 주석이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94. 6. 15.) 때 세삼스럽게 카터를 통해서 정상회담 의사를 전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북한측의 의도는 민족적 차원에서 전면적 관계개선에 있다기보다는 북핵에 따른 국제적 제재조치를 일시 모면하면서 북의 위기관리를 위한 미·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

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정상회담에 임하는 그들의 전략과 자세는 7월 8일 예정된 제3차 미·북회담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임.
- 소극적 카드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91년도 남북한 교류·협력 기본 합의서의 '원칙적 재확인'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정세와 이해관계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고 남북한에 관한 한 좀더 의연하게 민족적 차원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 그 동안 북의 요구조건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자세는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 그러나 민족적 차원의 회담도 냉전 이후 주변정세가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현실적 제약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남북정상회담의 가상의제와 주도방향

가. 민족공동체 의의에 호소

- 두 정상 간에 냉전 이후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음.
- 민족공동체 의의에 대한 호소
 - 세계질서의 큰 흐름
 - 미, 일, 구(EU) 간의 협력·갈등관계
 - 중국의 세계무대 참여에 따른 세계질서의 변화 가능성
 - 중국, 러시아의 불확실성
 - 냉전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과 동북아 질서
 - 미, 일, 중, 러의 대한반도 이해관계의 변화
- 한편 미, 일, 중, 러 등 주변 4국의 입장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반발

을 가져와서 남북한이 통일 이전에 각각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나. 미·북한관계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북은 미·북한 국교개설, 미의 북한체제보장, 미·북한 경제교류협력 등 일괄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타진하든지 또는 우리의 지지를 호소해 올 가능성이 있음.
- 통일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북핵의 투명성(또는 남북한 상호불가침 보장)을 전제로 미·북교섭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줄 수도 있음.(다만 우리의 통일목표와 기본전략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임)

다. 핵과 안보문제

- 북핵의 과거청산의 당위성(특히 민족차원의 투명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임.
- 핵 투명성을 전제로 미·일과 협력을 통해서 경수로건설 지지 가능성을 시사
- 당분간 통일을 유보하고 상당기간 평화·공존과 대외 공동협조(협력)를 통한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상호이해와 공동노력을 논의(추후 이를 위한 실무위가 추진하도록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간 hot line 설치를 실무자 선에서 협의토록 할 것임.
- 상호 체제유지 및 평화공존의 틀 속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실무차원의 협의를 추진하도록 원칙적 합의 도출

라. 경제교류·협력

- 핵 투명성과 평화공존체제를 전제로 경제교류, 협력은 민족적 차원에서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한국의 경제개발관리 경험은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특히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의 경험을 북의 입장에서 전수받게 될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임.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경험, 즉 ① 자신의 공업화 개발경험(성공, 실패 포함) ② 미, 일, 서구 등과의 경제교류협력의 경험 및 대외교류 ③ 舊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교류 협력경험을 가지고 있으며(北方政策) 이것은 북한경제의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식량, 에너지 등 물자부족에 대한 긴급지원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 동남아 등으로 이전해 가야 할 신발, 섬유 등 경공업분야의 산업시설을 북한으로 우선 투자하여 대 미, 일, 구 동 선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추진에 따른 사업들은 ① 直교역의 추진 ② OEM 등 주문생산, 수출지도 ③ 청진항, 나진항 등의 확장개발 및 주변 공단개발 ④ 남포지구 공업개발 및 한국기업 전용공단 개발투자 ⑤ 직항로 및 통신협력 등 다양한 사안이 예상됨.
- 특히 비무장지대 및 휴전선 인접지역 공동개발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경제개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예컨대 ① 평화시의 건설을 통한 남북한간 접경무역, 자유무역의 물리적 장을 제공 ② 평화공단을 조성하여 남한기업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신발, 가전, 전자산업 등을 유치, 개발 ③ 비무장지대 내 관광지개발 등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
- 다만, 두만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UNDP가 개입되어 있으며 중국, 일본도 다소 냉담하고 러시아도 소극적임. 또한 북한도 국제개

발사업으로는 크게 탐탁하게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음. 오직 청진, 나진의 배후지 공업화계획은 우리로서 민족적 차원에서 지원할 가치가 있을 것임.

마. 세계비핵화 선언

-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향후 일본의 핵무장 충동을 사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의 비핵화와 아울러 미국, 러시아 등 기 핵보유국을 대상으로 세계 핵무장사용금지조약의 필요성을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할 것임.

(초안 : 황인정·북한경제팀)

세계화의 개념과 접근방법

1994. 11. 21.

1. 문제 제기

- 지난 수년간에 걸쳐 한국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가 새로운 정책기조(orientation)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자생적 요인과 더불어 탈냉전 이후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에 따른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음.
- 자생적 요인 :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은 산업구조나 사회구조의 근대화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국력의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하였음. 한편으로는 공간적으로 정치적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의 확대 과정에서 개방과 국제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혁뿐만 아니라 관행의 변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음.
- 외생적 요인 : 한편 '93년 말 UR이 타결되고 '95년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21세기 세계경제질서의 기본윤곽이 분명해졌음. 경제활동에 관한 한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지구촌 경제”로 통합·변모할 것이며 국내시장 개념은 희석되어 가는 가운데 기업들은 무차별적 전방위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함. 이에 보

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 최근 김영삼 대통령의 제창에 따라 국가경영의 “세계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국정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음.
- 그러면 세계화는 기존의 국제화·개방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2. 국제화와 세계화

- 개방화와 국제화는 외부와의 교호작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향적 작용과 외향적 작용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임. 그러나 세계화는 외향적인 면이 적극적으로 강조되는 개념임.
- 개방화는 외국의 자본, 기술, 상품, 정보, 문화, 서비스 등이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로이 유입 수용(inward accomodation) 되게 하는 내향적 개방과 우리의 자본, 기술, 서비스 등을 자유로이 해외로 투자 진출(outward advancement)을 촉진하는 외향적 개방을 함축함.
- 국제화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관행을 국내에도(내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제도와 규범을 바꾸어 국제수준에 적응(adaptation)하는 과정과, 한편 우리의 제도와 규범을 국제적(외향적)으로도 적용하기 위한 확산(extention)하는 과정을 함께 내포하고 있음.
- 세계화는 이러한 개방화와 국제화의 과정과 결과로서 우리의 세계적 비중과 역할을 증대해 가는 것임. 즉 국제적 위상의 상승과 그에 걸맞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단계와 과정을 의미함.
 - 개방과 국제화는 한 나라의 국력이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식민지 체제하에서 약소국의 일방적, 강압적 시장 개방에서부터 오늘날 일부 개도국의 국제화 수준만을 가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세계화는 대내적으로 선진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경쟁력 내지 국력의 강화가 바로 그 전제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중심 국가의 일원으로 역할하는 것으로 표출될 것임.

3. 세계화의 목표와 구체적 내용

- 세계화의 목표 : 우리 경제의 국제화·세계화의 목표는 그를 추진하는 과정과 결과로서 ①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전방위 경쟁력을 제고하고 ②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선진화를 촉진하며 ③ 우리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고 그에 걸맞은 역할, 특히 세계경영의 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세계전략과 아울러 기업차원의 세계전략의 구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바탕 위에서 ① 세계경영의 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② 구체적으로 국가간 경쟁과 협력을 조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대내적으로는 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재(정치권, 정부, 기업)를 양성하고 ② 세계화를 촉진하는 제도와 의식의 개혁을 추진하며 ③ 창의성과 선진질서 및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 국가차원의 세계전략은 우리의 국익에 관한 견해(국가목표)를 정립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지역과 국가(미, 일, 중, 러시아, EU, 동남아 등)의 정치적 영향력, 자원, 기술, 정보, 문화, 인력 등을 어떻게 조합·활용할 것이며,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장치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를 설계 추진하는 것임. 물론 수시로 변화해 가는 세계환경(정세)을 부단히 점검하면

서 수정·보완해 가야 할 것임.

- 한편 기업의 세계전략은 기업경영의 세계화를 넘어서서 산업별 세계시장 관리목표, 세계 전역에 걸친 생산요소의 최적 동원방식, 기업의 현지화 전략 및 기술, 생산, 마케팅 등에 있어서 대내외 제휴 협력 등 경영사슬을 설계 추진하는 것임. 다만, 이는 국가차원의 세계전략과 조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세계경영의 중심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외형적 조건이 충족되고 구체적 역할이 수행될 때 가능해질 것임.
 - UN 안보이사국으로 피선 및 주요 국제기구의 상주요직 담당
 - WTO 주요직책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WTO 후속협상에서 선·후진국의 중간자·조정자 역할을 담당
 - OECD 회원국으로 가입
 - APEC 내 한·미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는 중간조정자 역할을 수행
 -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지정학적·경제역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중·일간의 조정역할수행 등
 - 세계경제의 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
- 한편 국가간의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후진국의 이해관계를 살펴서 보편성 있는 규범의 설정·보완이 요청됨. 따라서 이를 구상·추진할 국제수준의 전문인재가 정치권, 정부, 기업, 언론 등에 고루 분포되어 각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 단계에서는 정치적 안정과 일관성 있는 전략개념을 전제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경제의 국제화·개방화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임.
- 한편, 세계화는 개인의 의식의 수평선을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해야 할 것임. 즉 우리 국민과 각계각층이 “우물안 개구리 식” 자만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세계로 향해서 “스케일 크게 놀아 보자”는 식의 자기변신을 유도해야 할 것임. 정치가 미치는 국정영역이나 기업의 활동범위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넓혀가야 할 것임.

-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전 세계를 염두에 두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구상·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 기업인은 기업경영과 상품 및 서비스의 질과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세계 일류화하고 경영 규모와 조직(network)을 범세계화 하며,
- 국민들은 세계인으로서 국제수준에 걸맞은 인격(의식)과 자세를 갖추어 가야 할 것임.
- 따라서 정치권, 언론계, 정부, 기업, 교육분야 등에서 제도, 조직, 인사, 경영목표 등에 관한 철학과 발상의 대전환이 요청됨.

- 세계화의 의의 : 세계화의 목표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힘의 집결이 있어야만 세계화가 달성될 수 있음. 따라서 세계화는 하나의 정치적 구호차원을 넘어서서 이 시대 통치이념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함축하고 있음.

- 1960년대 “조국 근대화”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면, 1990년대 “세계화 구상”은 21세기를 향한 국민에너지의 동원을 위한 통치이념을 의미함. 특히 5개년계획이 선진국의 질적·구조적 수준을 시간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것이라면, 세계화 구상은 공간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자는 것임.
- 세계화 구상은 단기적으로 정부,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근로자 등 각계의 모든 국민이 세계경영 시각에서 국정운영에 동참·협조할 것을 요청하며,

- 장기적으로 민족적 긍지를 살려서 선진국 진입 내지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려는 역사적 명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세계화는 그 동안 우리가 세계 변방국의 하나로 20세기 초 선진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뼈아픈 국제적 수모로부터 시작된 종속의 역사를 슬기롭게 정리하고, 후세에게 뜻있는 민족사의 전개를 약속하자는 것임.

4. 한국경제의 세계화 과제

- 탈냉전시대 모든 국가 간의 관계는 이념이 아닌 경제에 우선을 두고 있음. 따라서 한 나라의 국력이나 국가경쟁력은 경제력에 달려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 구상은 주로 한국경제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한국경제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점차 심층 통합화되어 가는 세계경제의 유기적 일환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비중과 역할을 제고해야 할 것임. 따라서 한국경제의 세계화는 국제경쟁력 강화측면과 국제적 역할측면이 동시에 부각되어야 할 것임.
-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경제규모 면(GNP 규모, 국제교역 규모, 대GNP 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 등의 지표)에서 세계 10위(G-10) 이내로 부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세계 일류(一流) 기업이나 산업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정부행정의 생산성, SOC의 확충과 효율성, 교육의 질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 내지 규제완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임.
- 국제적 위상과 역할 면에서는 우선 세계경제 전략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며 OECD 가입, 세계은행, IMF, ADB, ESCAP, WTO 등 국제경제기구의 상주 요직을 차지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촉진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를 절도있게 조절하더라도 對개도국 원조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우리 기업의 경영 세계화와 아울러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보고서는 제도개혁과 전략개념 부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함.

5. 세계화 구상작업의 추진체계

- “세계화 구상”은 1960년대 추진했던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달리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구상·추진되어야 할 것임. 현 시점에서 세계화 구상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과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도 KDI가 중심이 되어 기업인, 언론인, 학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작업을 좀더 시간을 두고(예 : 6~7개월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리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작업과 토론에 참여시키는 과정 자체가 세계화에 대한 국민교육이 될 것이며 주요조직과 인사가 세계화 구상을 실천·추진하는 데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 될 것임.
- 따라서 주요 국정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정부, 경제단체, 언론, 교육기관, 노동자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이 세계화라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받아서 21세기 세계화를 위한 구상을 여러 형태의 공개·비공개 토론을 통해서 분야별로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임.
- 다만 정부는 세계화를 위한 기본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의 개혁을 조용히 구상 추진해야 할 것임.

(초안 : 황인정)

美·中 무역마찰의 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1995. 2. 13.

1. 문제 제기

- 지난 2월 4일 미국은 중국과의 지적 재산권 협상결렬에 따라 오는 2월 26일을 기해 중국의 대미 주요수출 35개 품목에 대해 100% 관세 부과조치를 발표하였음.
-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 및 중국 내 미국기업들의 활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逆보복조치 발표로 응수하였음.
- 그러나 美·中 양국은 극단적인 무역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재권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보복 관세부과 유예시한인 2월 26일까지 외교적 대화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음.
- 그러면 금번 사태의 배경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한 미·중 통상마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2. 미·중 무역마찰의 배경

- 최근의 미·중 무역마찰은 경제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에 대한 영

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과 개도국 지위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국측 입장 간의 갈등에서 초래된 측면이 강함.

가. 미국의 입장

- ① 대미수출을 통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의 미국 지재권 보호 미흡으로 상당 규모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② '94년 6월 중국의 최혜국우대(MFN)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영향력이 약화됨. 이에 따라 지재권협상을 또 다른 대중국 영향력 강화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 유도 및 WTO체제 하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기하고자 함.
- ③ 이와 함께 등소평 사후 중국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사전적 검증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되었다는 시각도 병존

나. 중국의 입장

- ① 중국은 '92년 1월 美·中 간 지적 재산권 양해각서에 따라 특허법, 상표법 수정 및 각종 조례 제정 등 지재권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
- ② 중·미 양국은 각각 국내사정과 경제발전 수준이 다르므로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분야에 따라 다른 입장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평등협상, 상호이해 및 양보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
- ③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미·중 간 지재권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미국 국내법인 스페셜 301조를 토대로 시장진입문제와 연계하여 지재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협상방법에 반대 입장을 견지

3. 향후 전개방향

- 최근의 지재권을 둘러싼 미·중 무역마찰은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경제패권주의에 대한 중국의 정면대결의 전초전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으나, 보복관세조치 발표 이후 양국의 미온적 대응 및 협상 타결을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감안할 때 장기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됨.
- 중국은 이번 사태가 '94년의 GATT 가입 좌절 및 2000년 올림픽 유치 실패 등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의 계속적인 대 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어 강경한 대응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 기본적으로 미국을 자국수출의 주요시장 및 자본과 기술도입의 중요한 창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최근의 지재권분쟁이 국제적인 정치문제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됨.
- * 특히 중국은 '92년 이후 급속한 성장추세에 있는 국내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GATT 복귀 및 WTO 체제의 조기가입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면, 미·중 무역문제는 양국간 감정적인 요소가 다소 개입하여 마찰을 빚고 있으나, 중국의 외교노선이 기본적으로 실리추구에 있는 만큼 금번 무역마찰이 조기에 타결될 전망이다.

4.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 우리로서는 이번 미·중사태를 단순히 수출입 영향측면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WTO체제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기조와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향후 한미통상관계에 대한 조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는 WTO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선발개도국을 대상으로 반덤핑 등 각종 수입규제 및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이 한미통상 현안인 육류, 자동차, 의료장비 등에 대해 국내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외교 및 통상전략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초안 : 황인정)

주제별 색인

주제별 분류

목차번호

〈거시경제〉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종합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박준경·유정호; 93. 7. 30.)
- 설비投資의 부진요인과 대책 (좌승희·김준일; 93. 8. 4.) 10
- 실명제 실시 이후의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대응 (최범수; 93. 8. 30.)
- 실명제 이후의 93-94년 물가전망 (박우규; 93. 9. 6.)
- '93년 하반기 전망과 정책대응 (거시팀·남상우; 93. 9. 16.)
- 실물경제 진단과 처방 (좌승희; 93. 9. 24.)
- 기업의 해외자본 조달 활성화 방안 (박원암; 93. 10. 12.)
- 海外資本 유입과 거시경제 운용방향 (이덕훈; 94. 10. 12.) 57
- 한국경제의 현실진단과 대응과제 (남상우; 93. 10. 13.)
- 설비투자 여건개선을 위한 과제 (김준경; 93. 11. 18.)
- '94년 물가정책의 基調 모색 (황인정·박우규; 94. 3. 3.) 28
-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안별 경제전망 (심상달; 94. 2. 7.)
- '94년 1~2월 물가상승 요인과 대책 (황인정·박우규; 94. 2. 21.)
- 新3低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유윤하; 94. 3. 30.) 32
- 거시정책 기본방향, 1994~97 (심상달·백웅기; 94. 7. 22.) 50
- 94년 2월중 산업활동 동향 평가 (백웅기; 94. 3. 31.)
- 최근의 경제동향 및 전망 (거시팀; 94. 4. 1.)
- 산업 兩極化와 경공업의 위상 제고 (박준경; 94. 4. 2.) 33

- 94년 1/4분기 무역수지 동향 분석 (유윤하; 94. 4. 4.)
- 貿易外收支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방안 (유윤하; 94. 5. 16.) 40
- 연화 및 油價의 전망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준경; 94. 5. 21.) 42

〈금융정책〉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 보완과제 (남상우; 93. 8. 16.)
- 금융실명제 실시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 (남상우·금융팀; 93. 8. 20.)
- 金融實名制의 산업별 영향 (박준경; 93. 9. 28.) 19
-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김준경; 93. 10. 21.)
- 금융 실명제의 보완 여부 (최범수·김준일·남상우; 94. 1. 27.)
- 어음(이 장)사건과 금융실명제 보완여부에 대한 검토 (최범수; 94. 1. 27.)
- 금융실명제 1년의 평가 및 향후과제 (김준일; 94. 7. 30.) 51
- 제2단계金利자유화의 추진방안 (이덕훈; 93. 10. 23.)
- 제3단계金利자유화 실시방안 검토 (강문수; 94. 4. 11.) 37
-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박원암; 93. 10. 28.)
- 자본自由化의 추진과 정책대응 (박원암; 93. 12. 14.) 21
- 자본자유화와 中小企業 자금난 (김준경; 94. 12. 23.) 66
- 資本流出 가능성과 거시경제적 전망, 1996~97 (김준경; 94. 12. 23.) 67
- 국민은행의 民營化와 책임경영체제의 유도방안 (이덕훈; 94. 4. 4.) 34
- 金融專業制度를 위한 정부구상의 배경과 함의 (최범수; 94. 8. 2.) 52
- 不渡率의 상승요인과 대응 (최범수; 94. 8. 31.) 54
- 先物去來所 설립의 시기와 방법 (이영기; 94. 11. 16.) 63
- 최근金利금등의 원인과 대책 (최범수; 95. 1. 16.) 69
- 貸金業 도입에 관한 검토 (김준경; 95. 2. 22.) 75

〈가격정책〉

- 최근 물가동향과 94~95년 소비자물가 전망 (박우규; 94. 9. 15.) 1
- 『무노동 部分임금』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적 타당성 (이종훈; 93. 5. 29.) 1
- 최근 노동쟁의의 배경과 대응방안 (이종훈·이규익·이영기; 94. 6. 20.) 65
- 합리적 勞使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방향 (이종훈; 94.11.28.) 7
- 근로자의 人事·經營 참여 문제 (이종훈; 93. 6. 30.) 7
-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의 파장과 대응 (이종훈·이영기; 94. 6. 29.) 35
- 勞使관계 현안 문제와 대책 (이종훈; 94. 1. 5.) 35
- 94년 勞使관계 대책방향 (이종훈; 94. 1. 10.) 35
- 블루 라운드(Blue Round)의 展望과 對應方案 (이종훈; 94. 4. 4.) 35
- 지하철·철도 파업(1주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상달; 94. 6. 23.) 2
- 임금안정의 당위성 (박우규; 95. 1. 6.) 2
- 秋穀收買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설광언; 93. 6. 1.) 2
- 농정개혁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대책에 대한 검토 (설광언; 94. 6. 2.) 62
- '94년도 秋穀收買 방향 (설광언; 94. 11. 3.) 62
- 1995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대응 (손재영; 94. 10. 19.) 53
- 토초세 憲法 불합치 결정의 시사점과 대응방안 (손재영; 94. 8. 6.) 53

〈기업정책·시장질서〉

- 경제력集中에 대한 기본사각과 정부역할 (유승민; 94. 6. 20.) 45
- 대기업集團 업종전문화의 쟁점과 정책대안 (유승민; 93. 6. 9.) 5
- 企業다변화규제와 업종전문화시책의 타당성 (유승민; 94. 6. 20.) 44
- 『國制그룹 해체』 偉憲 결정의 함의와 정책과제 (이영기; 93. 7. 30.) 9
- 기업집단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유승민; 94. 3. 21.) 9
- 自動車産業 新規進入의 쟁점별 분석 (유승민; 94. 5. 10.) 9

- 自動車産業 新規進入에 대한 見解 (유승민; 94. 10. 17.)	58
- 公기업별 민영화 추진방향 (송대희·재정팀; 94. 6. 20.)	46
- 체신산업의 구조조정과 非체신 公企業의 진출 (남일총; 94. 9. 1.)	
- 公정거래법상의 告發權 문제 (신광식; 94. 9. 28.)	55
- 규제완화정책의 평가와 보완방안 (최종원; 94. 4. 4.)	36
- 消費者 本位 정책기조 확립 (신광식; 95. 1. 4.)	68

〈재정·사회보장·지역경제〉

- 年金·基金 재정투융자 활용방안의 타당성 여부 (문형표; 93. 8. 21.)	14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방향 (황성현; 94. 4. 26.)	39
- SOC 民資유치에 따르는 중요쟁점 (김종기; 94. 10. 26.)	60
- 군인 및 공무원年金의 赤字발생과 그 대책 (문형표; 93. 6. 7.)	4
- 공무원연금의 赤字발생과 그 대책 (문형표; 94. 7. 2.)	47
- 지역醫療保險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권순원; 93. 6. 7.)	3
- 藥·韓醫界 업권분쟁의 배경과 대응책 (권순원; 93. 9. 6.)	16
- 雇傭保險 도입에 따른 몇가지 문제 (이주호; 94. 10. 31.)	61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김종기; 94. 1. 27.)	
- 地自制 하의 지역경제와 행정구역 문제 (김종기; 94. 1. 28.)	25

〈남북경제교류〉

- 南北交易의 內國間 거래 승인문제와 우리의 입장 (조동호; 94. 2. 3.)	26
- 獨逸통일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고일동; 94. 5. 19.)	41
- 北核 「시나리오」와 주변국의 입장 (황인정; 94. 6. 13.)	43
- 통일비용의 개념과 추계결과의 비교 (박 진; 94. 6. 23.)	
- 南北頂上회담의 가상의제와 대응 (황인정·북한경제팀; 94. 7. 3.)	48

- 對北 투자의 허용시기 (박 진; 94. 9. 30.)	56
- 북한경제의 自生力 분석과 개방가능성 (박 진; 94. 10. 19.)	59
- 미국의 對北韓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평가와 전망 (고일동; 95. 1. 26.)	72

〈대외경제〉

- 한-미협력과제와 아태경제협의체(APEC) 개관 (유정호; 93. 6. 19.)	
- 클린턴 대통령의 東北亞전략과 우리의 대응 (황인정; 93. 7. 15.)	8
- 美國 「財政赤字 감축계획」의 배경과 영향 (황성현; 93. 8. 20.)	12
- 美國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노력과 그 함의 (고영선; 93. 8. 20.)	13
- 탈냉전시대 미국의 대일전략 (이흥구; 93. 9. 20.)	
- '94 美·日 무역마찰과 우리의 대응 (황인정; 94. 2. 16.)	27
- 최근 美國경제의 建實性的 원인 (김준경; 94. 4. 26.)	38
- 미국의 UR이행법안의 내용 및 몇가지 쟁점 (좌승희; 94. 12. 1.)	
- 유럽통화제도의 위기와 전망 (박원암; 93. 8. 4.)	
- 日本 정계개편의 背景과 경제적 파급 (황인정·김준경; 93. 6. 25.)	6
- 日本 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황인정·김준경; 93. 8. 9.)	11
- 新엔高的 도래와 대응방안 (박원암; 93. 8. 21.)	15
- 엔高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김준경; 94. 7. 14.)	49
- 최근 日本의 경제활성화조치와 기대효과 (김준경; 93. 9. 27.)	18
- 日本의 물가관리 체제 (황인정; 94. 3. 3.)	
- 日本의 장기 경기불황의 특징 및 전망 (김준경·박원암; 94. 3. 9.)	30
- 엔화강세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박준경; 93. 11. 1.)	
- 탈냉전 시대의 中·日관계 전망 (황인정·이흥구; 94. 3. 7.)	29
- WTO 출범과 中國·러시아의 입장 (이흥구; 95. 1. 26.)	71
- APEC의 과제와 전망 (이흥구; 93. 9. 17.)	17
- APEC頂上會談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방향 (양수길; 93. 10. 19.)	20

- 대통령 訪日 · 訪中의 의의 (황인정, 1994. 3. 29.)	31
- 아르헨티나 경제개혁과 성과 (김준일; 94. 5. 17.)	
- 멕시코 外換危機의 배경과 합의 (좌승희; 95. 1. 16.)	70
- 美 · 中 무역마찰의 배경과 향후 전개방향(황인정; 95. 2. 13.)	73
- 멕시코 外換危機 극복을 위한 국제지원과 우리의 입장 (김준경; 95. 2. 21.)	74

〈개방화·국제화·세계화〉

- UR타결에 따른 정부대응정책의 기본방향 (송대희; 93. 12. 10.)	
- UR타결 이후의 농촌지역 중장기 정책방향 (설광언; 93. 12. 18.)	22
- UR 이후 국제협상에서 예상되는 競爭政策 문제 (최종원; 93. 12. 27.)	23
- 한국경제의 국제화 세계화 추진과제 (좌승희·이흥구; 94. 1. 8.)	
- 한국경제의 국제화와 世界經濟전략 구상 (황인정; 94. 1. 27.)	24
- 한국경제의 국제화 목표와 세계경제 전략 (황인정; 94. 1. 7.)	
- 21세기 세계경제질서의 조직화 방안 (좌승희; 94. 6. 21.)	
- WTO체제출범과 한국경제의 과제 (황인정; 94. 9. 9.)	
- 世界化의 개념과 접근방법 (황인정; 94. 11. 21.)	64

編著者：황인정(黃仁政)

學 歷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政治學科, 1954~1958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碩士學位), 1959~1961
美國 피츠버그대학교(博士學位: 政治經濟學), 1964~1968

主要經歷

財務部 豫算局 및 經濟企劃院 經濟企劃官, 1961~64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教授, 1968~76
UN 아세아開發行政센터(APDAC) 設立委員 겸 主任教授, 1973~78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선임) 研究委員·研究企劃室長, 1978~80
韓國開發研究院(KDI) 先任研究委員·副院長, 1981~88
國際民間經濟協議會(IPECK) 常勤副會長 1988~91
産業研究院(KIET) 院長 1992~93
韓國開發研究院(KDI) 院長 1993~95
韓國科學技術院(KAIST) 招聘教授 1995~97
江原發展研究院 院長(KDRI) 1998~現在
〈非常勤〉
文教部 大學教育政策委員會 전문위원 (有給) 1970~71
政策諮問委員：國務總理 1980~82, 總務處 1981~92, 內務部 1981~93,
建設部 1987~89, 外務部 1991~95,
國務總理 地方自治 實施推進委員會 委員 1985~86
UN亞太開發研究院(APDC) 運營理事 1983~92 및 理事長 1985~87
亞太地區開發研究·教育機關聯合會(ADIPA) 理事 1984~86 및 總長 1987~89
行政改革大統領委員會委員(幹事) 1988~89
行政刷新大統領委員會委員 1993~95
新經濟計劃委員會 民間委員 및 同 推進委員 1993~95
世界化推進委員會 委員 1995
政府投資機關 經營評價企劃團 團長 1996~98. 3
建設交通部 民間投資事業調整委員會 委員長 1996~97
學校法人 成均館大學 財團理事 1996

APEC 教育財團理事 1997~99

韓·아세안 21世紀委員會 위원(外務部 위촉) 1997~98

學校法人 尙志大學財團理事 2000~現在

賞 罰

1966 (8月) 美國 피츠버그大 타라크나드 다스賞(아시아發展 研究優秀賞)

1986 (3月) 大韓民國政府 : 修交勳章(崇禮章)

1992 (7月) 大韓民國政府 : 修交勳章(興仁章)

著書 및 論文

『行政과 經濟開發』,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0; 增補版, 1985.

『Management of Rural Change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2.

『Social Development in Action: Korea's Experience』, KDI Press, 1986.

『韓國經濟의 世界化 構想』, 韓國開發研究院, 1994.

『Economic Transformation of Korea, 1945~95』, the Sejong Institute Press, 1997.

『과감한 개혁만이 역사를 창조한다』, 오름사, 1998.

그外 다수의 國·英文 著書 및 論文

집필자 주요약력

강 문 수

- KDI 선임연구위원(현재)
- California대 (San Diego) 객원교수
- 한국은행
- Minnesota대 경제학 박사(84. 6)

고 영 선

- KDI 연구위원(현재)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연구원
- Stanford대 경제학 박사(93. 1)

고 일 동

- KDI 선임연구위원(현재)
- Iowa주립대 경제학 박사(88. 12)

권 순 원

- 덕성여대 경제학 교수(현재)
- KDI 연구위원
- 한림대학교 교수
- Johns Hopkins대 경제학 박사(84. 8)

김 종 기

- 호서대학교 교수(현재)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KDI 선임연구위원
- Cornell대 경제학 박사(79. 2)

김 준 경

- KDI 선임연구위원(현재)
- Columbia대 객원교수
- Virginia주립대 조교수
- California대(San Diego) 경제학 박사(88. 6)

김 준 일

- KDI 선임연구위원/거시경제팀장(현재)
- 재정경제원장관 자문관
- Brown대 경제학 박사(88. 2)

문 형 표

- KDI 연구위원/재정팀장(현재)
- Pennsylvania대 경제학 박사(89. 12)

박 우 규

- SK증권 상무(현재)
- KDI 연구위원
- Carnegie-Mellon대 경제학 박사(86. 5)

박 원 압

- 홍익대학교 무역학 교수(현재)
- KDI 연구위원
- MIT대 경제학 박사(84. 12)

박 진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재)
- 기획예산처 정부개혁팀장
- KDI 부연구위원
- Pennsylvania대 경제학 박사(91. 12)

박 준 경

- KDI 선임연구위원(현재)
- KDI 부원장
- 한국과학기술원 겸직교수
- Northwestern대 경제학 박사(82. 8)

백 응 기

- 상명대학교 경제학 교수(현재)
- KDI 부연구위원
- Iowa주립대 교수
- Wisconsin주립대 경제학 박사(88. 8)

설 광 언

- KDI 선임연구위원/연구조정실장(현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독Münster대 경제학 박사(87. 2)

손 재 영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 KDI 부연구위원
- UC Berkeley대 경제학 박사(87. 12)

송 대 희

- KDI 부설 경제정보센터 소장(현재)
- KDI 부원장, 연구조정실장
- Stanford대 초빙교수
- Pennsylvania대 경제학 박사(80. 2)

신 광 식

- KDI 선임연구위원/기업정책팀장(현재)
- Ohio 주립대 강사
- Ohio 주립대 경제학 박사(87. 9)

심 상 달

- KDI 선임연구위원(현재)

- 재정경제원장관 자문관
- New York주립대 Hunter대학 및 대학원 교수
- Minnesota대 경제학 박사(84. 9)

양 수 길

- 서울대 겸임교수·세계경제연구원 교문(현재)
- OECD 대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KDI 선임연구위원
- Johns Hopkins대 경제학 박사(84. 8)

유 윤 하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재)
- KDI 연구위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UCLA 경제학 박사(87. 2)

유 승 민

- 여의도연구소 소장(현재)
- KDI 선임연구위원
- Wisconsin주립대 경제학 박사(87. 12)

이 덕 훈

- 한빛은행장(현재)
- 대한투자신탁 사장
- KDI 선임연구위원
- Purdue대 경제학 박사(81. 8)

이 영 기

- KDI 국제교류협력센터 소장(현재)
- KDI 선임연구위원·부원장
- 재무부장관 자문관
- California 대 (San Diego) 초빙교수
- Boston대 경영학 박사(84. 1)

이 중 훈

-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교수(현재)
- KDI 연구위원
- Cornell대 경제학 박사(90. 8)

이 주 호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재)
- KDI 연구위원
- Cornell대 경제학 박사(90. 8)

이 홍 구

- 건국대학교 무역학 교수(현재)
- KDI 연구위원
- Eastern Michigan대 교수
- Michigan대 경제학 박사(88. 7)

전 홍 택

- KDI 부원장(현재)
- KDI 선임연구위원/연구조정실장
- 한국은행
- Cornell대 경제학 박사(85. 6)

조 동 호

- KDI 연구위원/북한경제팀장(현재)
- Pennsylvania대 경제학박사(91. 1)

좌 승 희

- 한국경제연구원장(현재)
- KDI 선임연구위원
-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Economist
- UCLA 경제학 박사(83. 6)

최 범 수

- 국민·주택은행합병추진위원회 간사(현재)
- KDI 연구위원
- 금융감독원 자문관(금융개혁위원회 위원)
- Yale대 경제학 박사(89. 12)

최 중 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현재)
- KDI 연구위원
-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Michigan대 경제학 박사(89. 6)

황 성 현

- 인천대학교 경제학 교수(현재)
- KDI 연구위원
- Pennsylvania대 경제학 박사(90. 8)

經濟論理와 政策開發

- 75가지 事例들 -

초판 인쇄 2001년 5월 10일
초판 발행 2001년 5월 15일
편집자 황인정
발행인 한달선
발행처 한림대학교 출판부
우편번호 200-702
주소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번지
(등록 : 제48호, 1983. 3. 10)
TEL (033) 240-1128
FAX (033) 242-1923

신저작권법에 의해 한국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89-87086-30-5 값 15,000원

파손된 책은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